

2026년 6·3 교육감 선거 기간제교사노조 정책질의서

◎ 전체 질의 사항

※ 구체 요구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찬/반으로 밝혀주십시오. 찬반으로 밝히기 어렵다면 기타에 표시하고 아래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란 에 기입해 주십시오.

※ 질의서 답변에 대한 보충 의견이나 기재된 요구 외에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기간제교사 정책이 있다면 그 역시 아래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란에 기입해 주십시오.

전국 공통

영역	구체 요구	찬성	반대	기타
고용안정	정규직화			○
	중도계약해지 조항 폐지	○		
차별 폐지 처우 개선	연가 총경력 산정	○		
	장기재직휴가 적용	○		
	육아휴직 보장	○		
	과도한 마약검사 차별 폐지	○		
	호봉 승급 차별 폐지	○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	○		
	특수교사 담임수당 지급	○		
권리 보장	1년 계약자 퇴직금에 성과 상여금 추가 정산 (부산 , 제주 제외)	○		
	정기적 소통 창구 마련	○		
	나이스 고유 번호 지급			○
	기간제교사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	○		
	기간제교사 교권 보호 대책 마련	○		

지역별 요구(해당 지역만)

지역	구체요구	찬성	반대	기타
전남	초등보결지원강사 기간제교사로 신분 회복			
경남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사 6시간 근무 보장			
경기	「교원 우 사서」경력 인정 및 호봉 삭감 철회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 알리고 싶은 기간제 교사 공약

기간제교사가 겪는 고용 불안, 처우 차별, 권리 침해는 결국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저 도성훈은 기간제교사의 권리 보장을 임기 내 핵심 과제로 삼겠습니다.

다만 법령 개정·교육부 협의가 필요한 것이 있고,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정규 교원의 채용은 중앙정부의 권한이기에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는 중도계약해지 조항은 취임 즉시 기간제교원 운영지침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호봉·정근수당·근속점수는 총경력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연가만 동일학교 4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이중 잣대입니다. 이 문제 인식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교육감 단독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육부 지침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취임 후에는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 교육부에 연가 산정 기준을 기간제교사 총경력으로 전환하도록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인사혁신처 및 교육부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을 공동 건의하겠습니다.
- 2025년9월부터 정규교사에게 신설된 장기재직휴가가 기간제교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것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기간제교사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적용하도록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을 인사혁신처·교육부에 공동 건의하겠습니다.
- 육아휴직 보장은 저출생 시대의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권리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에 깊이 공감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에 취임 후에는 기간제 교사의 육아휴직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채용 면접에서 임신·육아휴직 관련 질문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위반 학교에 대해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또는 예정) 사실이 재계약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교육청 인사 지침에 명시하겠습니다.
 - 관내에서 학교를 옮겨 다니며 근무했거나 짧은 방학을 두고 재계약한 경우, 이를 하나로 '계속 근로 기간'으로 합산하여 육아휴직 요건(6개월)을 쉽게 충족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 기간제 교사 채용시 과도한 마약 검사 차별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일 학교에서 근무 단절 없이 계약만 연장되는 경우, 최초 임용 시 제출한 검사 결과를 인정해 주도록 인사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을 정하여(1년), 그 기간 중 재 채용시 최초 임용시 제출한 검사 결과가 인정되도록 인사 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 현행 기간제 교사의 호봉 승급 제도는 정당하게 근무한 기간이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적인 제도입니다. 이것은 법령이 변경되어야 할 사안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체 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부 장관에게 개정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 성과상여금은 교육부 지침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당선 후에는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 호봉 산정 기준 통일 및 지급 기준 차별 폐지 공식 건의하겠습니다.
 - 인천시교육청 성과상여금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기간제교사 차등 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특수학급의 학생이 과원으로 1교사 2교사제로 운영되고, 2명 모두 담임으로 지정되면, 담임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 1년 계약자 퇴직금에 성과상여금 추가 정산에 대해서도 부산과 제주처럼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이스 고유번호 지급은 교육부와 KERIS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취임 후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교육청 내 기간제교사 경력 연계 관리를 위한 보완 행정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 기간제교사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취임 후 기간제교사 노조와의 협의회를 추진하겠습니다.
- 기간제 교사도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교권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규교원과 동일해야 합니다.
 - 정규교원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과 지침이 기간제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운영지침 전면 검토 및 개정하겠습니다.
 - 기간제교사가 피해를 신고할 경우 재계약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직접 개입하는 보호 체계 마련하겠습니다.
 - 기간제교사에게도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지원, 교권전담변호사 법률 상담,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